

# “MB 엉터리 사업, 포항 지진 불렀다”

민주 홍영표 원내대표, “지열발전 사업 2010년 시작 초기부터 문제 제기 있었는데도 총 391억원 투입 주먹구구식 진행 결과 이재민 등 발생... 엄정 조사”



홍 원내대표는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는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사업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에 대해 포항 시민은 우리가 실패 대상이 아니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말부터 시작했다. 사업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정부 예산 185억원, 민간 자본 206억원 등 총 391억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업기간인 2015년 이 지나서도 기술 상용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스위스와 독일에서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 발생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 검증도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먹구구식 사업을 진행한 결과 1300명의 이재민과 30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 사상 초유의 수능 시험 연기까지 초래했다”며 “정부는 어떻게 이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과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수백억 예산이 투입된 (사업) 결정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불투명한 사업에 포스코, 한수원 등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수구적인 문제 인식 하에 막말과 망언 수준의 질의가 많았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올바른 방향인지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대정부질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문 대통령, 반기문 접견 미세먼지 해결 역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범사회적 차원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진두지휘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반 전 총장을 만나 사회적 재난이 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방문 중 순환 규 바르미래당 대표가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반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반 전 총장은 16일 노영민 비서실장을 만나 위원장직을 수용하면서 이번 민남이 이뤄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청와대 측에서 노 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박상훈 의전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김해애 기후환경비서관, 김의겸 대변인이 배석했다. 김숙 전 유엔대사도 함께 했다. /뉴시스

## 유성엽 “경제난 원인부터 규명해야”

###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난의 원인규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유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안일한 경제 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또한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나열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난을 가속화 시킨 것이라며,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 진정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첫번째로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폼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오히려 홍영표 원내대표의 연설 중 일부를 인용하며,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확보한 재정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첫번째로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폼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은

것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의 실 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를 감세 기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유류세 상시 인하 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국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이다”면서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구조적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26일 평화당 정기 당원대표자 대회

전북도당위원장에 임정엽 내정 인준절차 밟아 중앙당 지도부·도당 대의원 등 대거 참석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회)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전주 노블레스웨딩홀 3층에서 민주평화당 전라북도당 제1차 정기당원대표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도당 정기당원대표자대회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포함한 장병완원내 대표, 김중희 도당위원장, 유성엽 수석 최고위원, 최경환 최고위원, 김광수 사무총장, 박주현 수석대변인, 허영, 서진희, 양미강, 민영삼 최고위원과 조배숙 전대표, 중앙당 당직자 및 전북도당 대표당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김진성 기자

이 날 민주평화당 전라북도당 당원대표자 대회에서는 1부행사는 식전행사로 난타공연과 당 홍보영상 상영으로 행사의 문을 열고 국민의례, 대회사, 참석 국회의원 격려사 축사에 이어 2부에서는 도당위원장 선출, 도당 임원개편, 그리고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북도당 당원대표자 대회에서는 이미 전북도당 및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합의한대로 임정엽(원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위원장)을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 기자

## ‘가족친화도시’ 완주 찾아가

진선미 여가부 장관, 모성보호 프로그램 진행 근로시간 단축 등 시행 ‘인증기업’ LS엠트론 방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족친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을 찾았다. 21일 진선미 장관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인 LS엠트론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가족친화인증사업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시퇴근 문화를 조성하고 휴가사용을 권장하는 사업이다. LS엠트론은 지난 2014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곳으로 직장어린이집과 여성휴게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임신·출산기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임신기에는 시간의 근로제한, 태아·검진시간 부여, 임신 축하선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출산기에는 휴가와 출산 선물을 육아기에는 수유시간 보장,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완주군도 주민들이 가족친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가족친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부모들끼리 시간을 정해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는 가족돌봄 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비롯해 아파트 공동체의 아이돌봄도 지원하고 있다. 완주군청은 지난 2017년 가족친화인

증을 받았으며, 관내에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총 8곳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이날 진선미 장관은 “현장에서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인증기업의 양적 확대와 함께 기업의 일하는 문화개선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 계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여성가족부도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관내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민들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